

북한경제의 변화와 향후 연구방향

권영경 | 통일교육원 교수 | kwonyk@unikorea.go.kr

I. 북한경제의 변화와 외부세계의 북한경제 모니터링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를 외부 관찰자가 고찰하고자 할 때 다음 세 가지의 상황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공식경제와 비공식경제가 상호 연계되어 재생산 메커니즘 및 축적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북한경제의 변화를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2011년 이후 북한 대외무역의 규모가 50억달러 이상 규모로 팽창하며 북한의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의 병진노선과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시행의 영향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측면부터 살펴보자. 북한의 비공식경제 분야는 김정일 시대 7·1조치를 통해 일시적으로 부분 제도화의 기회를 획득했다가 좌절되었지만, 근본적으로 공식경제의 복원이 불가능한 북한경제체제의 딜레마로 인해 김정은 시대 이후 공식경제와 연계되는 자기 재생산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시장을 활용한 공식경제 정상화 및 체제유지 전략을 시행함으로써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비공식경제 분야는 김정일시대에 비해 양적으로 확장되면서도 다양한 내수시장분야가 창출되는 형태로 진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기관, 국영기업소 등이 비공식경제 분야의 성장을 유도해 왔던 ‘돈주’와의 투자협력을 통해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재정 확충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점차 국가기관이 돈주의 사업영역을 권력을 활용해 약탈하거나 아예 내수시장을 새롭게 창출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비공식경제 부문의 북한경제 내 구조화 현상과 공식경제 부문의 시장을 활용한 정상화 시도는, 외부 관찰자가 북한의 거시경제 현상을 관찰하고자 할 때 분석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며, 공식경제 부문의 경제활동에 집중해 데이터를 추계하는 한국은행의 거시경제 통계의 한계를 제기하게 만든다.

한편, 두 번째 측면을 살펴보면,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은 2006~10년 연평균 25.2억달러에서 2011~15년 연평균 61.5억달러로 약 2.4배 증가함으로써, 대외무역의 성장이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매우 커졌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연평균 수출액이 2006~2010년 11.1억달러에서 2011~2015년 29.5억달러로 약 2.7배 상승하였는가 하면, 연평균 수입액은 2006~2010년 23.5억달러에서 2011~2015년 39.3억달러로 약 1.7배 증가함으로써 높은 수출 성장세가 대외무역 성장을 유도하고, 수입규모도 확충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실물생산력의 정상화가 따라가 주지 못하는 대외무역 규모의 성장은 당연히 무역수지 적자규모를 확대시키고 있지만, 연평균 수출액 대비 수입액 지수가, 2006~10년간 2.6에서 2011~15년간 1.6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김정은 시대에 북한의 수출능력 확대는 수입능력 확대와 연계되는 메커니즘이 형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시대에 북한의 외화가득 능력 제고는 수입능력의 확대→내수시장의 발달→실물경제 부문의 일부 활성화 가능성 등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의 병진노선과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영향 가능성 문제를 살펴보자면, 김정은의 병진노선이 핵·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투자자원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강조는 분명하지만, 김정일 시대 선군경제건설노선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거 병진노선과 김정은의 병진노선을 비교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시대별 북한 병진노선의 내용과 특징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
병진노선 명칭	경제·국방 건설 병진노선	선군경제건설노선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자원배분	국방공업(중공업) 우선 배분	국방공업 우선 배분	부분우선 및 균형배분
계획시스템 작동 실태	· 계획시스템 작동 · 비군수경제부문 계획적 관리	· 군수부문에서만 계획 시스템 작동 · 비군수부문 계획적 관리에서 배제	· 군수부문에서만 계획 시스템 작동 · 비군수부문 계획적 관리에서 배제
군수부문과 비군수부문의 관계 인식	· 자본형성효과 · 군수산업·중공업→농업·경공업 발전추동	· 자본형성효과 · 국방공업→민수산업 발전추동	· 자본형성효과 미언급 · 군수경제의 민수경제 제약성 인정
무기체계 개발 결과와 군수부문 역할	· 재래식무기체계 구축 · 비군수부문으로부터 일방적 자원이전	· 대량살상무기체계 구축 · 경제재건·회복 동원 부분 역할	· 핵무기 질량적 강화 · 인민경제 활성화 부분 역할
군수산업 유지·육성을 위한 축적전략	· 농업·경공업으로부터 잉여이전 · 해외외화유입 군경제	· 해외외화유입 군경제 · 4대특구정책 · 7.1조치(한정적)	· 해외외화유입 군경제 · 경제개발구정책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따라서 논쟁의 여지가 크겠지만, 군수공장에서 일부 인민생활 경제와 연관된 생산활동 가능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 부분은 북한경제의 부분 활성화 관찰에서 아직 의미있는 현상으로 발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결국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시행은, 농업분야의 경우 별로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지만, 기업소·공장 등에서 사회주의 모자를 쓴 비공식경제 부문 활성화 양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II. 대북제재 이후 북한경제 연구 방향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에 따른 기존 대북제재는 북한 대외무역의 90%의 비중을 차지하는 북중 무역과 외화가득 능력에 그다지 영향력이 큰 조치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 2321호 대북제재는 북한 외화가득의 핵심 품목인 무연탄 수출을 기존의 38% 수준으로 제약함으로써,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부분 활성화 현상을 보여 왔던 북한경제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인다. 물론 북중 경제관계의 특수성이 북중 교역 통계의 조작, 이를 보완할 다양한 경제관계의 발굴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단기적으로 북한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되지는 않는다. 이는 2000년대 이후 북한경제가 사실상 대북제재가 상수인 상황에서 1990년대 후반의 고난의 행군을 극복하고, 체제생존의 물적 조건들을 그럭저럭 재생산해 오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경제 연구는 미시적 차원의 북중 경제관계 연구 심화와 더불어, 북한 공식경제와 비공식경제의 연계 메커니즘 규명 그리고 섹터별 실물경제 현실 자료 수집·연구가 필요하다.